

## 민주연구원,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전략』 정책브리핑 발간

- 재생에너지 수익의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한 핵심 과제 제시
- “2,500개 확산 목표 ... 설비 보급 넘어 분산형 에너지전환 견인할 핵심 동력”

-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원장 이재영)은 5월 19일(화), 『국민이 만드는 전력,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전략』 정책브리핑을 발간했다.
- 이재영 원장은 “햇빛소득마을은 재생에너지 확산과 지역 수용성 갈등을 동시에 해소하는 생활소득형 주민참여 모델”이라며, “재생에너지 수익이 지역으로 환류되는 구조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에너지전환을 동시에 견인하는 핵심 정책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의의를 밝혔다.
- 브리핑은 햇빛소득마을이 2030년까지 2,500개소 조성될 예정인 만큼, 전국적 확산과 제도 정착을 위한 정책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 **【분산형 전력체계 구축】** 재생에너지 수익이 지역 내 소비·재투자로 이어지는 지역 환류 구조를 제도화해, 햇빛소득마을을 지역 기반 분산형 전력자산 모델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지역경제 선순환 유도】** REC 기반 지원을 활용해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장기고정계약과 PPA를 통해 안정적 수익구조를 구축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역 PPA·RE100 산업수요·공공기관 구매 등을 결합하는 단계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인프라 확충 및 제도 정비】** 출력제한과 접속대기 해소를 위해 배전망 확충과 ESS 보강 등 맞춤형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확충하고, 분산에너지 유연성 자원 제도 정비를 병행해 지역 전력체계의 안정성과 효율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투명한 거버넌스 확립】** 주민이 사업 구조, 수익배분,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회계·정보 공개와 외부 감사 체계를 마련하여 주민 신뢰와 대국민 수용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 민주연구원 배지영 연구위원은 “햇빛소득마을은 지역에서 생산·소비·수익이 함께 이어지는 분산형 에너지전환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모델”이라며 “재생에너지 대전환이 중앙 중심의 공급 확대를 넘어 지역이 직접 체감하고 주민들이 혜택을 공유하는 구조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끝/